

8·15 광복절 사면 어찌되나?

법무부 사면심사위 통과...李 결단만 남아

조국·최강욱·윤미향·조희연·정찬민·홍문종·심학봉 등 심사 명단 포함
조 전 장관 관련 여야 극명한 반응... “검찰의 희생양” vs “정치적 흥정 넘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조국 전 법무부장관(조국혁신당 전 대표)과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 여부에 대해 심사했다.

이번 사면심사를 통과한 진보 진영 인사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를 비롯해 △최강욱 전 국회의원 △윤미향 전 국회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진영 인사로는 △정찬민 전 의원 △홍문종 전 의원 △심학봉 전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인으로는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사면심사 통과가 유력시되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재판이 중지된 상태인 만큼 정치적 논란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받은 후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 명단을 확정한다.

이번 사면심사 결과를 두고 여야

의 입장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전 장관을 “검찰의 과잉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며 이번 사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정치적 흥정을 넘어선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국 대표가 형기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사면은 이해적”이라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번 사면 대상에 올라 국민적 관심이 큰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으로 지난해 12월 대법에서 2년 형을 선

고반야 조국혁신당 당대표와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고 구속되어 수형자로 7개월째 수용 중이었다.

조 전 장관은 수감 중 지난 7월 30일 ‘조국의 공부(감옥에서 쓴 편지)’를 출간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 사면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지난 5일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 수석비서관과 만난 자리에서 사면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정치적 의미가 큰 사면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사법 정의’와 ‘검찰 개혁’의 연장선에서 해석된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여전히 사면의 기준과 시기, 대상 선정의 공정성 문제를 두고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만호 기자



김 지사, 휴가 기간 책임행정·소통행보 강화

11~12일 AI·올림픽 유치 실행력 높이기 위한 도정 구상
완주 지역 명소·휴양시설 등 찾아 도민들과 소통 나서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가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여름 휴가 일정에 돌입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휴가를 단순한 휴식이 아닌, 도정 핵심과제를 구상하고 도민과 소통하는 시간으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북 전역에 많은 비가 예보된 상황을 고려해, 관내에 머무르며 모든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김 지사는 이번 휴가 중 ‘AI 사피엔스’와 ‘평창실록 동계올림픽 20년 스토리’ 등 도정 주요 과제와 연관된 도서를 읽으며 미래 전략을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다.

‘AI 사피엔스’는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성과 기술이 공존하는 방향을 탐색한 도서로, 김 지사는 이를 통해 전북이 역점 추진 중인 AI 융복합 산업의 비전과 정책적 함의를 다시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동계올림픽 20년 스토리’는 국제 스포츠 행사의 유치 경험과 전략을 담은 책으로, 김 지사는 이를 바탕으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실행계획의 내실을 다질 계획이다. 특히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 참여와 공감대

형성 전략도 함께 구상한다.

이번 휴가 기간 동안 전북 지역에는 30~100mm, 일부 지역은 120mm 이상의 강수량이 예보돼 있다. 김 지사는 이러한 기상 상황을 고려해 타지역 이동은 자제하고, 전북 관내에서 일정을 소화하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예정이다. 도지사로서 재난 대비와 상황 관리에 책임감을 갖고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지사는 가족과 함께 완주군 지역 명소와 휴양시설 등을 찾아 도민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시간도 갖는다. 관광 명소에서 만나는 도민들과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가족 중심 휴식 공간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생태관광의 전북 모델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김 지사의 이번 휴가 일정은 도정의 지속성과 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을 도민과 공유하고, 행정 리더십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휴가는 도정의 핵심 과제를 더 깊이 고민하고, 도민 목소리를 가까이에서 듣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며 “AI 산업과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실천 전략을 가다듬고, 기후 상황 속에서도 책임 있는 리더십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완주 외국인 근로자 처우 논의

김영훈 노동부 장관·유희태 군수 등, 숙소·농작업 현장 점검
유익식 군의장, ‘외국인구용관리시스템’ 개방·연동 등 건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완주를 찾아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농작업 현장을 점검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김 장관은 유희태 완주군수,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농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과 근로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 장관의 이번 방문은 혹서기 속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주거환경 실태를 확인하고, 최근 우려되는 인권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유 군수 등 관계자들과 함께 용진면 인근 외국인 숙소, 비닐하우스 등을 차례로 방문하며, 냉방시설과 온열질환 예방 조치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이름 부르기 캠페인’의 의미를 나누며, 외국인 근로자와의 공감대를 높였다.

유희태 군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완주군 농업과 지역사회를 함께 이끌어 가는 소중한 이웃”이라며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여건 개선과 생활 밀착형 정보 제공, 다문화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농가와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고 존중받는 상생 구조를 만들기 위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완주를 찾아 유희태 완주군수, 안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과 외국인 근로자 숙소와 농작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완주군청 제공>

중앙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긴밀히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완주군은 농업 인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에 의존하고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외국인 계

절근로자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고용24)’의 지자체 연동 및 활용 확대를 공식 건의했다.

/원주=열재복 기자

지역신문 자립 기반 향상 제도적 근거 마련

이수진 도의원,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제42회 임시회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 발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역신문법 제4조에 명시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원대상과 지원요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설치 △지역신문 경영 개선 등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수진 의원은 “지역 기반 신문의 위기가 가시화된 이후 지역신문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 제



정의 필요성이 장기간 논의됐으나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실패를 되풀이해 왔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었기에,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들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한 “특히 이번 조례에서 지원대상을 도내 일간지 뿐만 아니라 주간지도 함께 명시한 만큼, 더욱 경쟁력 있는 지역신문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여론을 다원화하여 도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성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투명한 행정 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해당 조례안은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민주, 쌍방울 김성태 ‘석방 로비’ 의혹 무속인 특검에 고발

당 정치검찰 조직기소대응TF “변호사법 위반 혐의... 무속인 김씨, 김건희 영향력 이용”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직기소대응TF(태스크포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보석 석방을 위해 김건희 여사의 인맥을 동원해 관사 등을 상대로 한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과 관련 무속인 김모씨를 지난 8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특위 단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김 여사의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을 찾아 김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날 고발에는 김기표, 이진태 의원도 함께 참석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쌍방울 김성태가 김건희 인맥 평창동 무속인(김씨)에게 20억원을 주고 보석 석방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김씨를 받은 김씨가 김 여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사법부와 법조계를 상대로 로비를 해 김 전 회장에 대한 보석 석방을 유도했다는 취지다.

한 의원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기 전 기자들을 만나 “(김씨의 의혹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소송에 관한 행위를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20여이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직기소대응TF 단장 등이 지난 8일 민중기 특별검사 사무실 인근에서 김건희 측근 무속인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로비성 금품을 수수한 것은 우리 사법정의 근간 흔드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이 이 점을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며 “오늘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했다.”

그는 “20억원의 돈이 실제로 김씨에게 전달됐는지, 또는 이 중 일부가 김 여사 측에 전달이 됐는지를 특검이 수

사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건희특검은 김 여사의 국정농단을 수사하는 게 목적이다. 이 사건과 같이 김 여사를 통해 국정개입한 게 있다면 수사 대상임이 명백하다”며 “특검의 수사기간이 한정됐으니 신속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경찰, 서부지법 사태 배후 의혹 전광훈 등 7명 출국금지 조치

서울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등 7명이 현재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지난 6월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며 이어 연장에 현재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외에도 지난 5일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던 보수 유튜버 신혜식·손상대씨, 김수열 전국안보시민단체총연합회장 등 7명도 비슷한 시기 출국이 제한됐다.

경찰은 지난 1월부터 이른바 ‘전광훈 전담팀’을 운영하며 전 목사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주도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5일에는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유튜브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전 목사는 특수전조물침입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른바 ‘신안심을 이용한 가스라이팅’이 있었는지 살피고 있다.

/뉴시스

전주시의회 “일부 의원 비위행위 시민께 사죄”

의원 9명 윤리특위 회부키로

전주시의회가 최근 일부 의원들의 불거진 비위행위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전주 시민에게 사죄했다.

특히, 보조금과 관광성 연수의 등 일탈행위를 한 시의원 9명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전주시의회 의장단은 8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의원들의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의장단은 “시의회 구성원들은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에 대해 깊은 우려 표명과 함께 더욱 성숙한 의회상 확립을 위한 자숙의 계기로 삼으려고 한다”며 “윤리특위를 통해 최대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과물을 내놓고, 시민 여러분의 평가를 받겠다”고 사죄했다.

윤리특위 회부 대상은 가족과 지인



업체에 예산을 몰아준 전운미 시의원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 개입 논란을 빚은 이국 시의원, 대통령 탄핵정국과 산불로 전국이 몸살을 앓을 때 관광성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 7명 등이다.

한편 시의회는 ‘해외연수 비용 부풀리기 의혹’과 관련, 경찰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관련 시의원들을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내사에 들어간 전운미 의원도 수사결과에 따라 똑같은 방법으로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행안부 “올해 상반기 지방세 55.6조, 작년보다 4.7조 ↑”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이 55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조9000억원) 대비 4조7000억원 증가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당초예산(115조1000억원) 대비 진도율은 48.3%로, 1년 전 진도율(46.0%) 대비 2.3%p 증가했다.

진도율은 한 해 전체 세입예산 대비 실제 수입액의 비중을 뜻한다.

올해 상반기 지방세 수입의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지방재정365 등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뉴시스